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 70년
1955-2025

더불어민주당 창당 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더불어
민주당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 70년
1955-2025

더불어민주당 창당 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 계층,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를 원한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제적 대립 심화, 인공 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나라에 위기가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가치를 위해 13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하나,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모든 사람이 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이다.

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셋,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권력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며, 시민과 당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넷,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다섯,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이념중심 진영외교를 극복하여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지평

을 확대할 것이다.

여섯,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다.

일곱,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을 이룬다.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할 것이다.

여덟,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한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지구 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아홉,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소득·건강·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이다.

열, '포용과 상생의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들 것이다.

열하나,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들며, 모든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열둘, '문화·예술·체육의 조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를 구현한다.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할 것이다.

열셋,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를 실현한다. 언론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공영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이 되어야 한다. 혁신과 신뢰의 정치, 성실한 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는 당원과 국민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CONTENTS

더불어민주당 창당 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축사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발간사 8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창당 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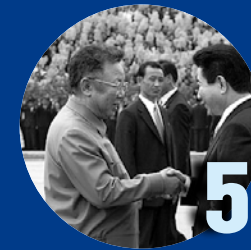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창당 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당사 편찬 분과장



3 일할 권리,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 23



4 진실규명과 인권국가를 향한 여정 30



5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 36



6 균형성장과 경제발전을 향한 여정 43



1 민주당 창당 12



2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16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70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맞서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온 70년입니다. 민주주의와 서민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창당과 함께 당명에 '민주'를 새겼습니다. 이승만의 친위쿠데타와 사사오입 파동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를 역사적 소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했던 신익희 선생 타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4.19 혁명에 함께했습니다. 서슬 퍼런 박정희 군사독재 하에서도 재야세력과 손 잡고 민주회복 개헌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신군부에 맞선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슴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국민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 넣었고, 87년 6월 항쟁의 거리를 거대한 시민의 함성으로 물결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 제 1조를 실현해 온 역사입니다. 언제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주권의 시대를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부정 부패 국정농단을 촛불혁명으로 물리쳤고,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내란사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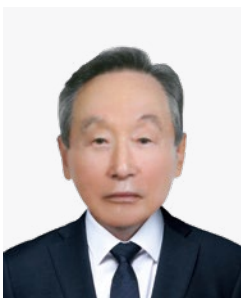
'빛의 혁명'으로 막아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더 큰 민주주의로 이겨냈으며 그 현장에는 진정한 주인,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그 역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싹을 피웠고, 이재명정부에서 국민주권시대라는 이름으로 활짝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0년, 더불어민주당이 이룬 성과는 차곡차곡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복지는 국민권리로, 성장동력으로 발전했습니다. IMF 국난을 극복하고, IT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외교지평을 넓혀 다양한 나라들과 무역의 길을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결코 꿈이 아니며,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70년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와 평화에서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또 민생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70년 당사는 꼭 더불어민주당의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모두의 역사입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당을 지켜주신 당원들의 속 깊은 이야기이며 더불어민주당을 아끼고, 질책해 주신 지지자들의 기록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있었기에 불굴의 역사, 극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과 함께 헌신적으로 당을 지켜주고 계신 당원 동지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과 당원이 승리하는 백년정당으로 갑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고, 국민주권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이 책자 안에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와 성과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백년정당의 기틀과 비전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창당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권노갑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당의 70년 역사는 단지 한 정당의 정치사가 아닙니다.

그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세운 출발이었으며, 그 시작은 1955년 9월 19일 이승만 독재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창당된 민주당이었습니다.

당시 창당 정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체의 독재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기한다.
2. 공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대의정치와 내각책임제 구현을 기한다.
3. 자유경제 원칙하에 생산을 증강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분배로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며 특히 농민, 노동자, 기타 근로대중의 복리향상을 기한다.
4. 민족문화를 육성하며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세계문화의 진전에 공헌함을 기한다.
5. 국력의 신장과 민주우방과의 제휴로서 국토통일과 국제정의를 확립을 기한다.

민주당은 창당 당시 제시한 정강을 오늘날까지도 기본 정신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독재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입각한 국민경제, 민족문화 육성 및 국제교류, 국력신장과 민주우방과의 국제적 제휴 및 국제

정의 실현, 그리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70년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에서 온갖 탄압과 박해에 맞서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의 고난과 희망의 역사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다듬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과거와 달리 내치와 외치가 구분되지 않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따라서 AI 등 최첨단 과학기술혁명 경쟁, 강대국들과의 군사 통상경제 대결 등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들을 잘 준비해서 국민의 행복과 나라발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당원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즉, ‘망원경적 역사의식과 현미경적 현실인식’,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만능적인 AI시대로 무엇을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삶의 현장에서 왜 정치를 하는지, 국민의 행복과 나라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노력하는 당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집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지적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원의 헌신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입니다.

민주당은 정책정당으로서 정치인을 혐오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정당들이 민주당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앞서가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창당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당사 편찬 분과장
위성곤

“승리의 역사, 국민과 함께 한 70년의 여정”

존경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한 민주당 70년사』를 헌정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민주당의 빛나던 순간을 정리해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정청래 당대표님의 확고한 의지와 선도적인 관심이 밑바탕이 되었으며, 권노갑, 송춘한 공동위원장님께서 이끄신 ‘창당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격동의 세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룬 승리의 연대기

민주당 70년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시간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의 숭한 탄압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주화와 경제발전, 복지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70년 안에는 허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늘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윤

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간 70년의 여정

민주당 70년은 좌절과 승리, 위기와 극복이 숨 가쁘게 교차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편찬위원회는 이 역사를 미화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미래 세대가 기억했으면 하는 민주당 70년의 여정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70년의 여정을 정리하는 일에 애써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기현, 김준혁, 정을호 의원님 등 편찬위원 동료들께서 사명감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획과 방대한 실무를 전담해 주신 박혁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신가연 주임, 신동호 실장의 노고도 컸습니다. 이 분들의 정성과 노력 없이는 이 소책자의 완성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70년사는 굴욕과 좌절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위대한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숭고한 기록입니다. 이 소책자가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당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과 당원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더 든든히 뒷받침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굳건한 시대적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2025년 12월 

Part

1

민주당 창당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들의 결집(1949)
2. 호헌동지회 결성과 신당운동(1954)
3. 대동단결로 민주당 창당(1955)
4. 더불어민주당의 시작(2015)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들의 결집(1949)

이승만 정권에서 여당 역할을 했던 한국민주당이 몰락하자 대한국민당의 신익희, 대동청년단의 지청천 등 임시정부 세력과 한민당이 통합하여 새로이 민주국민당(민국당) 창당

2 호헌동지회 결성과 신당운동(1954)

1954년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위해 벌인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해 반독재 민주세력은 민국당을 중심으로 호헌동지회를 결성해 신당운동 전개



사사오입 개헌에 항의하는 야당의원들 © 중앙일보

3 대동단결로 민주당 창당(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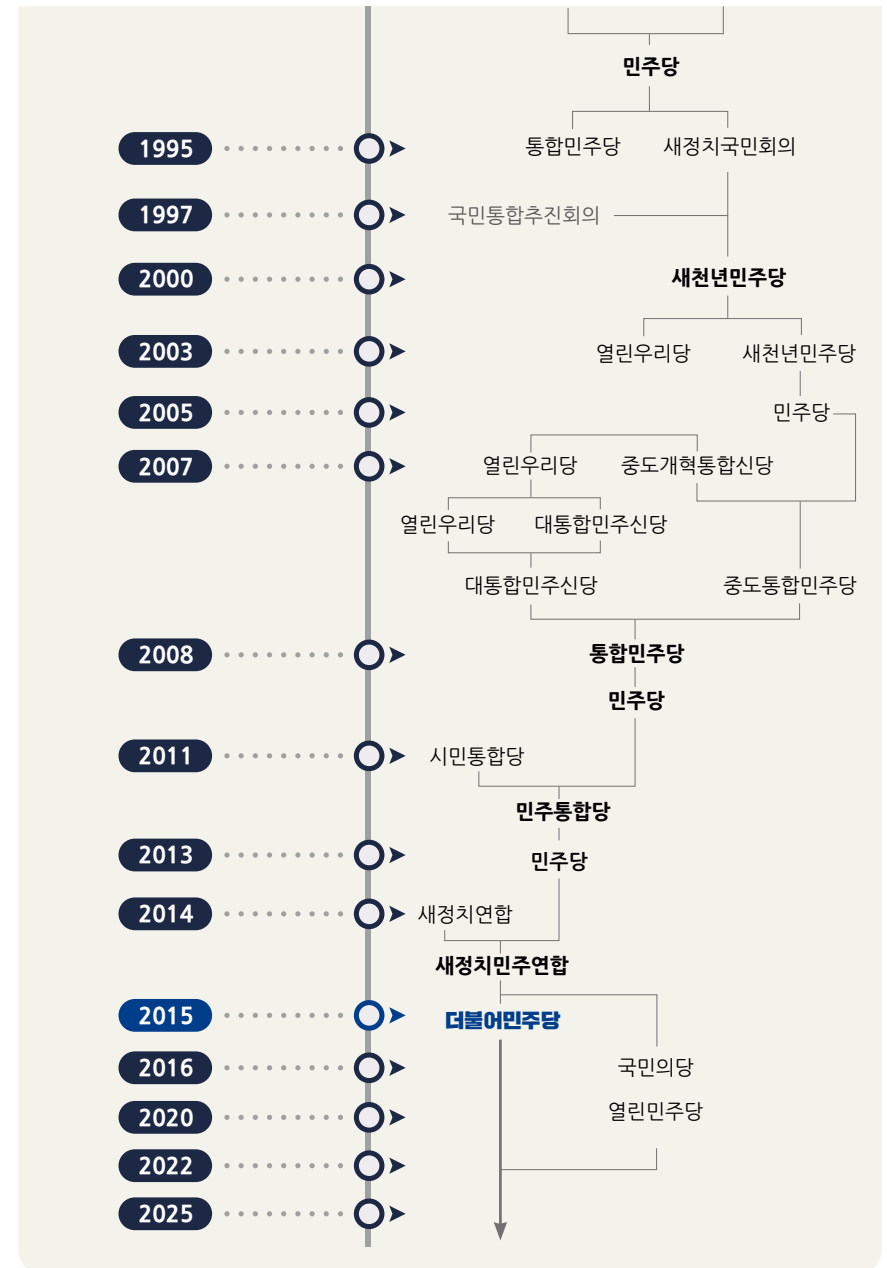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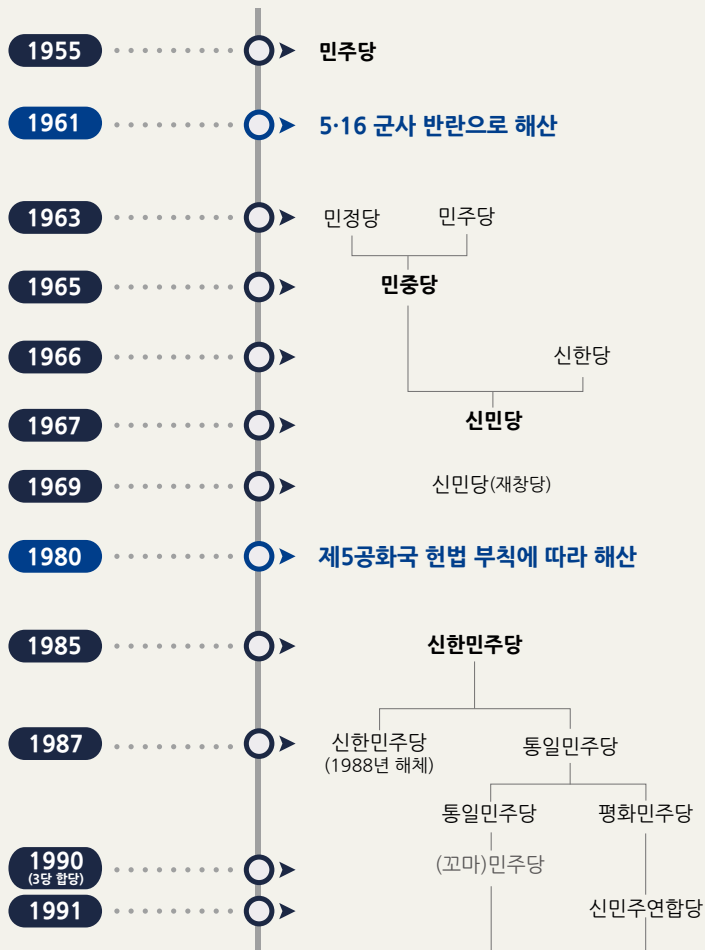
1955년 9월 19일 명동 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발기인 대회
© 더불어민주당 60년사

1955년 9월 19일, 야당 세력, 재야세력, 자유당 탈당세력이 대동단결해 반독재 민주화의 기치 아래 신익희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자유, 민주, 통일을 핵심가치로 내건 '민주당' 창당

4 더불어민주당의 시작(2015)

1955년 창당한 민주당은 온갖 수난과 탄압 속에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면서도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 2015년부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계속 전진

| 민주당계 정당 계보도 |



출처: 박혁, <민주당의 역사 1955-2025>, 들녘출판사, 2025.

Part 2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1. 못살겠다 갈아보자(1956)
2. 4.19 혁명과 민주당 집권(1960)
3. 박정희 3선 개헌 반대투쟁(1969)
4. 김대중 대선 출마와 박정희 영구집권 음모 경고(1971)
5. 반유신헌법 개헌투쟁(1974)
6. 호헌철폐 독재타도 - 87년 직선제 개헌(1987)
7. 지방자치제 부활(1991~1995)
8.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1997)
9.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확대(2000~2005)
10. 호주제 폐지(2005)
11. 국민참여재판제 도입(2007)
12. 박근혜 국정농단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2016~2017)
1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2019)
14. 내란 저지와 대통령 파면(2024~2025)
15. 역사적인 검찰 개혁(2025)

1 못살겠다 갈아보자(1956)

1956년 치러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신익희와 부통령 후보 장면을 내세워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로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며 절대빈곤을 타파하려는 시대적 요구 대변



1956년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와 신익희·장면 후보의 선거 게시물을 보는 시민들 © 더불어민주당 60년사

2 4.19 혁명과 민주당 집권(1960)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0년사

민주당 마산시당에서 부터 시작된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 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지 면서 이승만 독재정권 을 무너뜨리고 민주당 이 집권

3 박정희 3선 개헌 반대투쟁(1969)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의 3선 개헌저지를 위해 신민당은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개헌저지와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격렬히 투쟁



삼선개헌반대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신민당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0년사

4 김대중 대선 출마와 박정희 영구집권 음모 경고(1971)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신민당 후보는 향토 예비군제도 폐지, 4대국 안전보장,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참신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공약을 내세웠고, 박정희가 집권하면 영구 총통제를 할 것이라고 경고



1971년 4월 8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연설하는 김대중 후보 © 더불어민주당 60년사

5 반유신헌법 개헌투쟁(1974)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후,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신민당은 1974년 8월 지도부 개편과 함께 대통령 직접선거, 대통령 임기 4년과 3선 금지, 완전한 3권 분립,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하며 재야세력과 연대투쟁 전개



1974년 11월 16일 개헌을 주장하며 당사에서 단식 농성 중인 신민당원들 © 더불어민주당 60년사

6 호헌철폐 독재타도-87년 직선제 개헌(1987)

신민당은 재야세력과 함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1987년 6월 민주항쟁 주도, 결국 제9차 헌법 개정을 이뤄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 국민기본권 확대, 헌법재판소 설치 등 대한민국 민주화에 결정적 기여



1987년 명동성당 앞에서 박종철 추모 행렬과 가로막는 경찰 © 더불어민주당 60년사

7 지방자치제 부활(1991~1995)



1990년, 김대중 평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끝에 1991년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선거 실시. 1995년부터 기초 및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마련

1990년 10월 노태우정부에 지방자치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던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모습 © 한겨레

8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1997)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의정부 출범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손을 흔드는 김대중 대통령 © 대통령기록관

9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확대(2000~2005)

2000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2005년 국무위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10 호주제 폐지(2005)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노무현정부는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및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주도로 의결하여 가부장중심의 대한민국 가족문화를 획기적으로 개혁



2005년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5석 중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가 폐지되는 순간 © 미디어 오늘

11 국민참여재판제 도입(2007)

노무현정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도입

12 박근혜 국정농단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2016~2017)



박근혜 퇴진 시위에 나선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 © 뉴시스

국정농단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연대와 집권당 일부의 공조를 이끌어 내면서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

1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2019)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어 비례성을 확대하고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위성정당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다투는 여야의원들 © 연합뉴스

Part 3

일할 권리,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

1. YH무역 여성노동자 신민당사 농성(1979)
2. 노사정위원회 설립(1998)
3. 고용보험, 산재보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1998)
4. 전 국민연금시대 개막과 의료보험통합(1999)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6. 주5일제 실시(2004)
7.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2005)
8. 퇴직연금제도 도입(2005)
9. 방과후학교 실시(2006)
10.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2006)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2007)
12.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2007)
13.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2010)
1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당론 추진(2011)
15. 아동수당 도입(2018)
16. 코로나19 국난극복(2020)
17. 종대재해처벌법 제정(2021)
18. 노란봉투법(2025)

14 내란 저지와 대통령 파면(2024~2025)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12월 14일 내란행위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했으며, 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내란의 밤,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는 특전단을 몸으로 막는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 © 경향신문

15 역사적인 검찰 개혁(2025)

2025년 9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77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 © 오마이뉴스

1 YH무역 여성노동자 신민당사 농성(1979)

폐업한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이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노동자들은 물론, 당원, 기자들에게도 무차별한 폭력행사. 신민당은 관련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과 비상대책위원회 및 구속노동자들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해 적극 대응



농성중인 YH무역 여성노동자들 앞에서 선 신민당 의원들
© 직설

2 노사정위원회 설립(1998)

김대중정부는 경제주체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한 IMF외 환위기 극복과 노동개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운영했던 노사정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로 위상 확립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현판식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 고용보험, 산재보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1998)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해,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4 전 국민연금시대 개막과 의료보험통합(1999)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1995년)에 이어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지역까지 국민연금대상을 확대하고,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을 일원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통과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시혜적인 생활보호법을 대체하기 위해 복지는 인권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에 기초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제정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2001년 9월 1일 마포구 상암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황 점검하는 김대중 대통령 © 김대중도서관

6 주5일제 실시(2004)

김대중정부가 2000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노무현정부는



2004년 한 사업장 내 주5일제 근무시행 안내
© 연합뉴스

2003년 8월, 주 40시간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적용

7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2005)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급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에게 신속한 생계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 동시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견을 위해 129 보건복지콜센터 개소



2005년 11월 개통한 보건복지콜센터, 일명 '희망의 전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 퇴직연금제도 도입(2005)

노무현정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폐지되거나 중간정산이 늘면서 퇴직금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한계를 드러내자, 노사정 대화와 토론을 통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무료 컨설팅과 공공기관 적용을 적극 유도

9 방과후학교 실시(2006)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12일 부산 서명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방문
© e영상역사관

지역,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 확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대응을 위해 기존의 방과후교실,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심화 학습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과후 교육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10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2006)

노무현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정책목표로 근로빈곤문제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소득 미만인 사람이 일할 경우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도입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2007)

노무현정부는 초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 간병에 대한 가족부담을 덜고 간병·수발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호제도추진기획단 구성과 시범사업 실시 이후 관련 법안을 2006년 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2007년 4월 본회의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

12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2007)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법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여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부터 실시. 2014년 기초연금법으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기능

13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2010)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야4당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핵심정책으로 약속. 이는 2011년 3무 1반(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복지국가 구상으로 확대



2010년 4월 12일 친환경무상급식 야5당 대표 정책협약식
© 참여연대

1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당론 추진(2011)

노무현정부의 공공의료 핵심정책이기도 했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1년 1월 6일 민주당 정책의원 총회에서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당론으로 확정되었고, 문재인정부의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재정지출 합리화 정책으로 지속



2000년 9월 1일 민주당 주최 건강보험 개혁 토론회
© 청년의사

15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인권과 자녀양육을 위한 대표적인 가족수당 정책으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 2017년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대상으로 도입한 후 만 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이재명정부는 임기 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안내 포스터 © 보건복지부

16 코로나19 국난극복(2020)

국경봉쇄 없이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진의 헌신으로 K-방역은 세계적인 선도모델로 자리매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마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 © 아시아경제

크 수급, 소상공인 지원, 백신 확보 등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청 및 민관협력체계를 주도

1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



2020년 11월 11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발의 및 제정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고,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여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 시행

18 노란봉투법(2025)

사용자의 범위확대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세 번째 개정안을 공포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2025년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 © 머니투데이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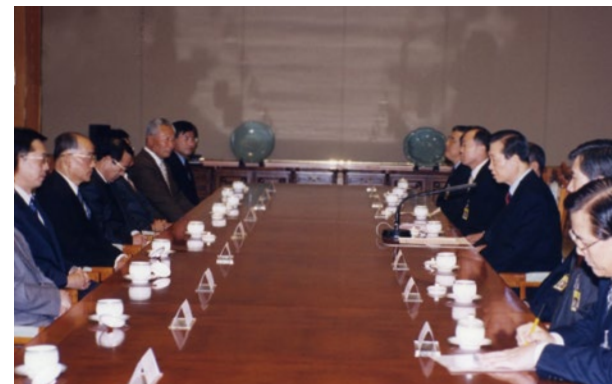
4

진실규명과 인권국가를 향한 여정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9)
3.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2000)
4. 여성부 신설(2001)
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
6.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2017)
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2021)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1)
9.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2024)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

군사정권기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의문사한 이들의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



2000년 10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 김대중도서관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9)

정부수립 초기단계에서 총파업과 단독선거(5.10 총선거) 반대 등 일련의 혼란 상황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공산폭도로 몰려 희생된 사건의 진상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4.3평화공원과 기념관 건립, 유해 발굴을 비롯해 국가차원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금 지급.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가진상조사, 특별재심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2000년 1월 11일 제주 4.3특별법에 서명하는 김대중 대통령 © 제주 4.3평화재단

3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2000)



40여 년간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와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 100년 역사에서 최초로 만장일치 수상 결정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그 분들에게 바쳐야 마땅합니다"

—수상연설 중에서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 후 연설하는 김대중 대통령
© 연합뉴스

4 여성부 신설(2001)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는 당강령에 여성부 신설을 명시했고, 1997년 대선 공약으로 제출한 후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정책 총괄·조정 및 남녀차별 규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부 신설



2001년 1월 29일 한명숙 초대 여성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김대중 대통령 © e영상역사관

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

인권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김대중 후보는 '인권법 제정 및 국민 인권위원회 설립'을 1997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3년여간 진통을 겪은 끝에 2001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헌판식 © 국가인권위원회

6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2017)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놓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는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항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에 돌입. 2014년 세월호참사 특별법에 근거한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큰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하여 2기 특별조사위원회 가동



2014년 8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본청 앞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대어 투쟁결의대회 © 연합뉴스

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2021)



2003년 7월 26일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열린 합동위령제 © 연합뉴스

2004년에 제정된 법은 현행법 관련 규정 미비로 희생자와 유족의 조속한 명예회복과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책무 규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 공동체 회복지원 등을 규정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1)

정부수립 초기단계에서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52명이 발의하여 국회 통과



여순사건 당시 반군 협력자 색출을 위해 주민들을 학교에 집결시킨 진압군 © 제주의소리

9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2024)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 © 뉴스핌

이태원참사의 발생과 구조실패의 근본원인들을 밝히려는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위의 영장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조사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한 차례 거부권 행사 이후 관련 조항이 빠진 채로 국회 통과. 실질적인 특조위 수사는 정권교체 이후 실시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단 편성 등 재수사 지시

Part

5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

1. 평화통일을 당 노선으로 채택(1958)
2. 국시파동(1986)
3. 금강산 관광 시행(1998)
4. 최초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2000)
5.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2000)
6. 국제대회 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 입장(2000)
7.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제정(2005)
8.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07)
9.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10. 제3차~제5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2018)
11. 국제대회 11년 만의 남북 공동 입장(2018)
12.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2019)

1 평화통일을 당 노선으로 채택(1958)



1954년 제네바에서 19개국 외상들이 모여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통일방안과 외국군 철수 문제를 논의 © 한겨레21

1958년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내용에 따라 유엔 감시하 자유선거로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을 제정해서 남북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평화통일 방안을 선언

2 국시파동(1986)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두환 정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 모습 © 연합뉴스

3 금강산 관광 시행(1998)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중단될 때까지 10년간 진행되어 약 200만 명이 참여하며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 역할



1998년 11월 18일 오후 동해항 부두에서 첫 금강산 관광길에 나서기 위해 출항하는 '현대 금강호' © 한겨레신문

4 최초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2000)

분단 55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다섯 개 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은 모습 © 대통령기록관

5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2000)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태운 버스 ©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이루어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00년 8월 제1차를 시작으로 2018년 제21차 상봉 행사까지 남북한 통틀어 4천 290가족, 2만 604명이 상봉

6 국제대회 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 입장(2000)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 때 처음으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해 전 세계가 감동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하는 남북선수들 © 연합뉴스

7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제정(2005)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005년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민족통일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념적 대립을 해결하고, 통치권자 1인의 의지가 아니라 법적 근거 속에서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시행할 근거 마련

8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07)



개성공단 가동 당시 섬유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모습 © 오마이뉴스

남북 경제공동체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가동.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남한 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을 뒷받침 할 법률 제정

9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평양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고 선언

10 제3차~제5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2018)

판문점에서 열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구상 발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 대통령기록관

11 국제대회 11년 만의 남북 공동 입장(2018)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 2007년 장춘 동계 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에 국제경기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

Part

6

균형성장과 경제발전을 향한 여정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요강(1961)
2. 대중경제 주창(1968)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1999)
4. IMF외환위기 극복(2001)
5. 공공기관 지방이전(2003)
6. 자유무역협정 체결(2004~2007)
7. 코스피 2000시대 개막(2007)
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2007)
9. 경제규모 세계 10위 재진입(2020~2021)
10. 개도국에서 경제선진국으로 격상(2021)
11. 코스피 4000 달성(2025)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하고 있는 남북 선수단 © 연합뉴스

12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2019)

2019년 6월 30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전 66년 만에 남·북·미 3국 정상이 극적으로 함께 만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간 민주당 정부의 역사적 성과



판문점 남측에서 만난 남·북·미 세 정상 © 대통령기록관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요강(1961)

4월 혁명 이후 수립된 민주당정부는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권(관치) 경제 지양, 중소기업 활성화, 경제기획원 설치, 국토건설사업 등을 추진

2 대중경제 주창(1968)



1969년 신동아 11월호에 실린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대중경제론
© 오마이뉴스

1968년 신민당의 공식적인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었고,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균형성장과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골자로 한 대선공약으로 제시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1999)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구. 2001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등 6개 분야 발전의 제도적 기초 마련



1999년 4월 1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재하는 김대중 대통령 © e영상과학관

4 IMF외환위기 극복(2001)

김대중정부는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조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타파를 선언.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 단행으로 IMF구제 금융에서 조기졸업했으나 대규모 실업사태와 양극화 문제 대두



1998년 1월 23일 국회 금모으기 행사에 참여한 김대중 당선인과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 © 연합뉴스

5 공공기관 지방이전(2003)



2004년 1월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 노무현사료관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정책으로 혁신도시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천명하고 2003년 기본구상 수립.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수

6 자유무역협정 체결(2004~2007)

노무현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능동적 개방정책을 추진. 한·칠레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한·EFTA, 한·미 FTA를 순차적으로 타결



2007년 4월 2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타결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담화 © e영상역사관

7 코스피 2000시대 개막(2007)

참여정부 출범 당시 600선 수준이었던 종합주가지수(KOSPI)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7년 사상 처음 2000선을 돌파.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도 2007년 7월 사상 최고치인 1천조 원을 돌파



2007년 7월 25일 종가기준 코스피 2000을 돌파하자 환호하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직원들 © 연합뉴스

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2007)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리로 무산된 후, 후속대책으로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이어나가면서 중앙행정기능을 중심



2009년 11월 12일 민주당의 이명박-한나라당 행정 복합도시 백지화 시도 규탄대회 © 충북인뉴스

으로 문화·교육·국제교류 등의 기능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2007년 착공, 2014년 세종청사에 36개 기관 이전으로 완공

9 경제규모 세계 10위 재진입(2020~2021)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제반등과 회복을 달성했고, 그 결과 2019년 경제규모(명목GDP) 세계 12위에서 2020년 세계 10위로 도약했고, 2021년에도 이를 유지. 같은 시기 1인당 구매력평가지수(PPP)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추월

10 개도국에서 경제선진국으로 격상(2021)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는 한국을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선진국으로 이동한 최초 사례

11 코스피 4000 달성(2025)



2025년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실

12.3 불법계엄과 내란이 초래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2300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KOSPI)가 이재명정부 출범직후 강력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전하면서 6월 20일 3000선을 회복했고, 정부의 상법개정 추진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10월 27일 4000선 돌파



- 
- | | |
|--|---|
| <p>2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제 폐지 ● 퇴직연금제도 도입 ●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제정 <p>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실시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p>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코스피 2000시대 개막 ●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p>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p>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당론 추진 <p>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의 시작 <p>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국정농단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p>2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 <p>2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 11년 만의 남북 공동 입장 ● 아동수당 도입 ● 제3차~제5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 <p>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p>2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국난극복 ● 경제규모 세계 10위 재진입 <p>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개도국에서 경제선진국으로 격상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p>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내란 저지 <p>2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봉투법 ● 역사적인 검찰개혁 ● 코스피 4000 달성 |
|--|---|

당원 교육용 교재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 70년
1955-2025

발행일 : 2025.12.08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발행인 : 정청래

기획 : 더불어민주당 창당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책임편집 : 위성곤

디자인 : (주)디오피폴리컴

인쇄·제본 : 썬프린팅